

“신한울 수소제거기 과도한 위험 가정”

국감서도 발목잡기 의혹제기

민주 “불꽃 타 화재 가능성”
국힘 “수소 제거하는 현상”

올해 말 가동을 목표로 최종 검사를 받고 있는 경북 울진 신한울원전 1호기와 관련한 수소제거기(PAR) 성능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반복됐다. 안전성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과도한 의혹제기로 발목잡기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원전의 PAR 불꽃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PAR는 원전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제거하는 안전설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속 대책으로 국내 원전에 설치됐다. 그런데 지난해 한 언론에서 국내 원전의 수소제거기가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실험 영상이 공개되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양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PAR 소위원회 주관으로 한국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1호기(왼쪽)와 2호기 전경. 매일신문 DB

원자력연구원에서 재실험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불꽃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심지어 화재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백금도금을 한 외국 제품과 다르게 국산 수소제거기는 세라믹 코팅이 돼 있어 고온에서 불꽃이 날리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한울 1호기의 경우 불량 수소제거기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운영허가를 받았으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시험운전을 하고

있다”며 수소제거기 재실험 영상의 화재 장면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은 “세라믹 코팅과 불꽃 현상”과 관련, “국산, 외국산 모두 세라믹 등 골격을 이루는 구조에 촉매제를 코팅하는 것이지 촉매제 위에 세라믹 코팅했다는 말은 잘못”이라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 불꽃이 날리는 현상에 대해서 “PAR에 코

팅된 촉매제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불꽃 자체가 수소를 제거하는 현상으로 수소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과도한 위험 상황을 가정해 PAR 재검증을 계속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존재하는 최고 제품을 검증할 거처 설치한 만큼 우선 가동 후 미래 기술이 개발되면 보완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에너지공기업들 잦은 설계 변경 10여년간 공사비 3조4천억 낭비

한수원 11년간 1조8천억원 증액
이사회 승인 불필요 제제도 못해
양금희 “발전시설 부실 건설 우려”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수시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10여년간 3조4천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발전 5개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388건이며, 여기서만 2천172차례 설계변경이 있었다.

이들 공사의 최초 낙찰금액은 11조 276억원 가량이었으나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최종 공사금액은 14조 4624억으로 3조4331억이 늘어났다.

공사 1건당 평균 5.8차례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동안 공사비 외에 설계용역

등 부대비용도 늘었다. 착공 시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설계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한 까닭에 별다른 제제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양 의원은 분석했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한수원으로 11년간 약 1조8천574억이 늘어나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한전(약 5천528억), 서부발전(4천172억), 중부발전(3천87억), 동서발전(2천217억), 남부발전(354억), 남동발전(36억) 순이었다.

양금희 의원은 “한전이 역대 최고 적자를 기록하며 장기간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산하기관들과 함께 신속한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발전 시설 건설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면서 “에너지공기업 시설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다.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만큼 발전시설이 부실하게 건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승혁 기자 psh@imaeil.com

“월성원전 오염수 왜곡보도, 광우병 사태 떠올라”

외부 누설 확인·보수 완료된 사안
김영식 “아니면 말고식 문제 제기
인근 주민 “생존권 위협” 집단행동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의혹과 관련해 왜곡보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과거 광우병 사태와 비슷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원전 인근 주민들은 왜곡보도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전문가들은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의혹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지난 달 MBC는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돼 동해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원은 5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

조 외부 슬래브 누설을 확인해 같은 달 보수가 완료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보수 전 경로도 알 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쓰면서 ‘줄줄 새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지금도 누수가 발생한다고 오해하게 만든다”고 했다. 원전에는 누수 발생에 대비한 차수막 하부유공관이 있어 오염수 유출을 이중으로 막는다. 지하 연구배수시설에 모인 오염수는 주기적으로 방사선을 측정, 중합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 하지만 해당 보도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생략됐다는 게 박 위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오염수의 동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매주 방사능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었고, 한수원의 미조치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2019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 방안 수립요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언론 보도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현장 시찰을 요구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오는 19일 경주를 직접 찾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은 “이번 월성원전을 둘러싼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와 야권과의 공조는 마치 광우병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며 “국감을 앞두고 월성원전 안전성 문제를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이산화 시킨 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인근 경주 양남읍·감포읍·문무대왕면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광객 발길이 뜸 끊기는 등 생존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주시민들이 왜곡보도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박승혁 기자

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 곳곳에 왜곡보도 비판 현수막을 내건 이들은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병훈 기자 kbh71133@imaeil.com

대구보건대학교 는 코시국에도
취업률 No.1
 2021 교육부발표 취업률, 대구지역 전문대학 1위

가스공, 직장 내 괴롭힘 신고 3위

산업부·중기부 산하 공기관 조사
한전·한전KPS 각 10건 공동 1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는 3위 수준의 신고 건수가 접수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60개 공공기관 중 32곳에서 8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은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로 각각 10건의 신고가 접수돼 공동 1위였다. 이어 한국가스공사가 8건으로 3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건, 공영홈쇼핑 4건

순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전력공사 8건, 한전KPS 7건, 한국가스공사 6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이 중 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취한 경우를 빼면 한전KPS의 직장 내 괴롭힘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전력공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원과 지역별 조직이 많은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개별 근로자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남아있지는 않는지 주무 중앙부처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반복된 신고가 접수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원영 기자 chae10@imaeil.com

최소 침습!
 간이식 환자의
 희망이 됩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간이식 환자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